



#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

## -민사법 규정을 중심으로-

이재영\*

01	I. 서론
02	II. 국내 입법 동향
03	III. 외국 입법례 및 시사점
22	IV. 주요 쟁점과 과제
26	V. 결론

### 요약

#### □ 지난 10월 “동물은 물건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에 의하여 제출되었음

- 이는 현행 법제가 동물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며, 「민법」이 동물을 물건으로 정한 데 기인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임

#### □ 개정안은 동시에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물건이 아니지만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 개정안은 같은 내용을 민법에 둔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 이들 국가들은 동물의 치료비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특칙이나, 집행법상 동물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 등을 함께 마련하고 있음
- 프랑스는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대신에, ‘감각을 지닌 생명체’임을 명시하며, 형법상 여러 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

#### □ 「민법」상 물건 개념은 전체 법질서에 연관되므로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동물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하여는 별도로 입법이 필요함

- 「민법」상 물건 개념은 전체 법체계에 연관되어 있으므로 개정시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음
- 타 입법례가 손해배상 범위 또는 압류금지에 관한 특칙, 형사상 물건 관련 규정을 마련한 점, 물건 포함 여부와 별도로 동물보호법상 소유권 제한 규정 등을 두었던 점을 참고할 수 있음



## I. 서론

법무부가 지난 7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 제출안’이라 한다)이 9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되었다.<sup>1)</sup> 이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못한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현행 「민법」이 동물을 일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sup>2)</sup>

그런데 위 정부 제출안은 같은 조(條)에서 항(項)을 바꾸어,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에서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sup>3)</sup>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sup>4)</sup>

| 표 1 | 「민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252條(無主物の 歸屬) ①·② (생 략) ③ 野生하는 動物은 無主物로 하고 飼養하는 野生動物도 다시 野生狀態로 돌아가면 無主物로 한다.	제252조(소유자 없는 물건 등의 귀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야생(野生)하는 동물은 소유자 없는 동물로 하고, 기르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소유자 없는 동물로 한다.

1999년 및 2012년에도 「민법」 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규정 신설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위 정부 제출안 외에도 여러 영역에서의 동물 법적 지위 개선에 관한 입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한편, 정부 제출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오스트리아, 독일 및 스위스 입법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는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하는 타 입법례와 달리 형법 및 민법에 동물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는 조항들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1) 의안번호 2112764

2) 법무부 보도자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2021년 7월 19일자;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 중 2. 제안이유.

3) 준용(準用)의 사전적 의미는 “표준으로 삼아 적용함”이며, 법적으로는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규율 대상이 유사한 경우 주로 활용되지만, 준용 규정만으로는 무엇이 법률의 내용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준용 대상 규정의 범위나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191).

4) 법무부 TF 논의 당시에는 압류 대상에서 반려동물을 제외하거나 동물 살상에 대한 위자료 도입도 논의되었다고 하나, 위 정부 제출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박솔잎,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독자적 법적지위 인정」, 『법률신문』, 2021년 7월 19일자, (최종 검색일 : 2021. 11. 24.),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1588&kind=&key=%EB%B2%95%EB%A5%A0%EB%A7%8C%ED%8F%89>>].

이에 아래에서는 국내에서의 관련 입법 동향과, 유사 조항을 입법한 서구 국가들에서 어떠한 입법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소개하고, 정부 제출안이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동물의 실효적인 보호를 위하여 입법을 고려할 만한 조치가 어떠한 것이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

## II. 국내 입법 동향

### 1. 종래 「민법」 개정 움직임

1999년 구성된 법무부 주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물건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동물보호 정신을 반영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 신설이 논의되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종래 동물을 물건으로 다루던 것과 차이가 없고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기에 굳이 민법에 둘 필요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토의 결과 이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이었으며, 당시 개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sup>5)</sup>

2011년 법무부에서 주관한 민법개정위원회 제3기 2분과에서도 동물 법적 지위 관련 논의가 있었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의 입법례와 이에 대한 학계의 평가를 소개하고, 해당 규정을 도입할 경우 손해배상, 압류금지 규정 등도 함께 개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논의되어<sup>6)</sup> 이를 기초로 개정 시안이 마련되었으나,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법개정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지 않아<sup>7)</sup> 입법에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2017년에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개정안(이정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313)이 제출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 2. 최근 관련 입법 동향

제21대 국회에서는 정부 제출안 외에도 여러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민법」 개정안으로 동물에 대한 살상 시 치료비 및 위자료 배상 특별규정 신설(안 제764조의2)을 내용으로 하는 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482) 및 동물 물건 지위 부정, 동물의 살상 시 치료비 및 위자료 배상 특별규정(안 제98조의2, 제764조의 2)을 신설하는 안(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571)이, 「민사집행법」과 관련하여 압류금지물건으로 「동물보호법」 제12조에

5) 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2004, pp.129-131.

6) 법무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회의속기록 제7권-2011년 제3기위원회 2분과회의-』, 2011, pp.503-507.

7) 윤철홍, 『민사법 체계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법무부, 2018, p.175.

따라 등록을 마친 등록대상동물을 추가(안 제195조)하는 안(한무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403) 및 반려동물을 추가(안 제195조)하는 안(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573)이 발의되었다. 특히 「동물보호법」의 경우 53건의 일부개정법률안과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부개정법률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제안되기로 의결되었다.<sup>8)</sup> 한편 2021년 1월 19일에는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한 제3보험상품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475)이 발의된 바 있다.

### Ⅲ. 외국 입법례 및 시사점

#### 1.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최초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민법전에 마련한 국가이다. 오스트리아 국회는 1988년 3월 10일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 법률」(Bundesgesetz über die Rechtsstellung von Tieren)을 의결하여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는 오스트리아 「일반민법」(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ABGB) 제285조의a와 제1332조의a 2개 조문으로 구성된 것으로, ①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고(제285조의a), ②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합리적인 범위의 치료비는 동물의 시장가치를 초과하더라도 배상하여야 함(제1332조의a)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sup>9)</sup>

표 2 | 오스트리아 「일반민법」(ABGB) 규정<sup>10)</sup>

원 문	번 역
§ 285. Alles, was von der Person unterschieden ist, und zum Gebrauche der Menschen dient, wird im rechtlichen Sinne eine Sache genannt.	제280조. 사람과 구별되고 인간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을 법적인 의미에서 물건이라 한다.
§ 285a. Tiere sind keine Sachen; sie werden durch besondere Gesetze geschützt. Die für Sachen geltenden Vorschriften sind auf Tiere nur insoweit anzuwenden, als keine abweichenden Regelungen bestehen.	제285조의a.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물건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동물에게 적용된다.

8) 해당 안은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제도를 신설하고 유죄 판결 시 수감명령·이수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제21대 국회 제391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2021. 12. 3., pp.11-13).

9) 윤철홍, 앞의 글, pp.10-11.

10) 밑줄 표시된 부분이 신설된 내용이며, 밑줄이 없는 부분은 종래 존재하던 내용이다. 이하 같다.

원 문	번 역
§ 1332a. Wird ein Tier verletzt, so gebühren die tatsächlich aufgewendeten Kosten der Heilung oder der versuchten Heilung auch dann, wenn sie den Wert des Tieres übersteigen, soweit auch ein verständiger Tierhalter in der Lage des Geschädigten diese Kosten aufgewendet hätte.	제1332조의a.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합리적인 동물보유자가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 또는 치료를 시도하는 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비록 그 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배상되어야 한다.

※ 자료 : 윤철홍, 앞의 글, p.11 이하 번역 참조.

이외에도 오스트리아는 1996년 「강제집행법」(Exekutionsordnung, EO)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을 정한 제250조를 개정하여, 감정적 유대가 있고 양도할 목적이 아닌 가축<sup>11)</sup>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하였다.<sup>12)</sup>

표 3 | 오스트리아 「강제집행법」(EO) 규정

원 문	번 역
§ 250. (1) Unpfändbar sind  4. nicht zur Veräußerung bestimmte Haustiere, zu denen eine gefühlsmäßige Bindung besteht, sowie eine Milchkuh oder nach Wahl des Verpflichteten zwei Schweine, Ziegen oder Schafe, wenn diese Tiere für die Ernährung des Verpflichteten oder der mit ihm im gemeinsamen Haushalt lebenden Familienmitglieder erforderlich sind, ferner die Futter- und Streuvorräte auf vier Wochen;	§ 250. (1)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압류할 수 없다.  4. 감정적 유대가 있고 양도할 목적이 아닌 가축 및 채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영양공급에 필요한 경우 1마리의 젖소 또는 채무자가 선택한 2마리의 돼지, 염소, 또는 양, 그 밖에 4주 동안의 사료 및 깔짚의 재고

## 2. 독일

독일은 1990년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의 개선을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stellung des Tieres im bürgerlichen Recht vom 20. August 1990)을 입법하였다. 이는 동물에 관하여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BGB)상 물건의 개념뿐 아니라 손해배상 및 소유권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민사소송법」(Zivilprozessordnung, ZPO)과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 TierSchG) 등 개별법상 동물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정은 독일 내 국민의 인식 변화 및 법제화 진전과, 오스트리아 「일반

11) 2021. 6. 30.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동물을 그 가치가 750유로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는 문구가 있었으나, 2021. 7. 1.부터 발효된 개정 규정에서는 해당 문구가 삭제되었다 [오스트리아 법률정보시스템 웹사이트 (최종 검색일 : 2021. 11. 24.)],

<<https://www.ris.bka.gv.at/Dokument.wxe?Dokumentnummer=NOR40233760&FassungVom=&Abfrage=Bundesnormen&ShowPrintPreview=True>>].

12) 오스트리아 법률정보시스템 웹사이트 (최종 검색일 : 2021. 11. 24.), <<https://www.ris.bka.gv.at/eli/rgbl/1896/79/P250/NOR12038115>>.



민법」(ABGB) 개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sup>13)</sup>

구체적으로, 「민법」(BGB)에서는 오스트리아 「일반민법」(ABGB)에서와 같이 ①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고(제90조의a), ② 동물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 특칙(제251조 제2항 후문)을 두었으며, 나아가 ③ 소유권의 내용에 대한 특칙(제903조 후문)을 신설하였다. 「민사소송법」(ZPO)에서는 ④ 집행처분에 대한 취소·중단·일시 정지에 관하여, 집행처분이 동물에 관련된 경우에 대한 특칙(제765조의a 제1항 3문)과, ⑤ 집에서 비영리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압류금지 특칙(제811조의c)을 신설하였다. 「동물보호법」(TierSchG)에서는, 종래 동물에 대한 일정한 불법행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1년에서 5년 사이 또는 영구히 보유·매매·접촉 금지명령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제20조), ⑥ 제20조에 따른 금지명령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사의 결정으로 보유·매매·접촉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0조의a).<sup>14)</sup>

표 4 | 독일 「민법」(BGB) 규정

원 문	번 역
§ 90 Begriff der Sache	제90조 물건의 개념
Sachen im Sinne des Gesetzes sind nur körperliche Gegenstände.	이 법률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만을 말한다.
§ 90a Tiere	제90조의a 동물
<u>Tiere sind keine Sachen. Sie werden durch besondere Gesetze geschützt. Auf sie sind die für Sachen geltenden Vorschriften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nicht etwas anderes bestimmt ist.</u>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에 대하여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251 Schadensersatz in Geld ohne Fristsetzung	제251조 즉시의 금전배상
(1) Soweit die Herstellung nicht möglich oder zur Entschädigung des Gläubigers nicht genügend ist, hat der Ersatzpflichtige den Gläubiger in Geld zu entschädigen.	(1)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채권자의 전보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배상의무자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2) Der Ersatzpflichtige kann den Gläubiger in Geld entschädigen, wenn die Herstellung nur mit unverhältnismäßigen Aufwendungen möglich ist. <u>Die aus der Heilbehandlung eines verletzten Tieres entstandenen Aufwendungen sind nicht bereits dann unverhältnismäßig, wenn sie dessen Wert erheblich übersteigen.</u>	(2) 원상회복이 과도한 비용지출에 의하여만 가능한 경우에는 배상의무자는 금전으로 배상할 수 있다. 피해입은 동물을 치료하는 비용이 동물의 가액을 현저히 상회한다는 것만으로 그 비용지출이 과도한 것이 되지는 아니한다.

13) 윤철홍, 앞의 글, p.16.

14) 독일 연방법률 관보 웹사이트 (최종 검색일 : 2021. 11. 17.).

<[https://www.bgb.de/xaver/bgb/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start=//\\*\[@attr\\_id=%27bgb190s1762.pdf%27\]#\\_bgb190s1762.pdf%27%5D\\_1637128846194](https://www.bgb.de/xaver/bgb/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start=//*[@attr_id=%27bgb190s1762.pdf%27]#_bgb190s1762.pdf%27%5D_1637128846194)>.

원 문	번 역
§ 903 Befugnisse des Eigentümers  Der Eigentümer einer Sache kann, soweit nicht das Gesetz oder Rechte Dritter entgegenstehen, mit der Sache nach Belieben verfahren und andere von jeder Einwirkung ausschließen. <u>Der Eigentümer eines Tieres hat bei der Ausübung seiner Befugnisse die besonderen Vorschriften zum Schutz der Tiere zu beachten.</u>	제903조 소유자의 권능  물건의 소유자는, 법률 또는 제3자의 권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물건을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고 또 타인의 어떠한 간섭도 배제할 수 있다. <u>동물의 소유자는 그 권능의 행사에 있어서 동물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u>

※ 자료 : 양창수, 『2021년판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 박영사, 2021.

### | 표 5 | 독일 「민사소송법」(ZPO) 규정

원 문	번 역
§ 765a Vollstreckungsschutz  (1) Auf Antrag des Schuldners kann das Vollstreckungsgericht eine Maßnahme der Zwangs vollstreckung ganz oder teilweise aufheben, untersagen oder einstweilen einstellen, wenn die Maßnahme unter voller Würdigung des Schutzbedürfnisses des Gläubigers wegen ganz besonderer Umstände eine Härte bedeutet, die mit den guten Sitten nicht vereinbar ist. Es ist befugt, die in § 732 Abs. 2 bezeichneten Anordnungen zu erlassen. <u>Betrifft die Maßnahme ein Tier, so hat das Vollstreckungsgericht bei der von ihm vorzunehmenden Abwägung die Verantwortung des Menschen für das Tier zu berücksichtigen.</u>	제765조의a 집행보호  (1) 집행처분이 채권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매우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선량한 풍속에 합치하지 않을 정도로 가혹한 것인 경우,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처분의 전체 또는 부분을 취소, 중단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법원은 제732조 제2항에 규정된 명령을 할 권한이 있다. <u>그 처분이 동물과 관련된 경우, 집행법원은 그 처분이 가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물에 대한 사람의 책임을 고려하여야 한다.</u>
§ 811c Unpfändbarkeit von Haustieren  (1) Tiere, die im häuslichen Bereich und nicht zu Erwerbszwecken gehalten werden, sind der Pfändung nicht unterworfen.  (2) Auf Antrag des Gläubigers lässt das Vollstreckungsgericht eine Pfändung wegen des hohen Wertes des Tieres zu, wenn die Unpfändbarkeit für den Gläubiger eine Härte bedeuten würde, die auch unter Würdigung der Belange des Tierschutzes und der berechtigten Interessen des Schuldners nicht zu rechtfertigen ist.	제811조의c 가축의 압류금지  (1) 가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되지 않는 동물은 압류할 수 없다.  (2) 압류금지가 동물보호의 중요성 및 채무자의 정당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채권자에게 가혹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동물이 고가임을 이유로 압류를 허가한다.

※ 자료 : 법무부, 『민사소송법 번역집(독일)』, 2019. 번역 참조.

| 표 6 | 독일 「동물보호법」(TierSchG) 규정

원 문	번 역
§ 20	제20조
<p>(1) Wird jemand wegen einer nach § 17 rechtswidrigen Tat verurteilt oder nur deshalb nicht verurteilt, weil seine Schuldunfähigkeit erwiesen oder nicht auszuschließen ist, so kann ihm das Gericht das Halten oder Betreuen von sowie den Handel oder den sonstigen berufsmäßigen Umgang mit Tieren jeder oder einer bestimmten Art für die Dauer von einem Jahr bis zu fünf Jahren oder für immer verbieten, wenn die Gefahr besteht, dass er weiterhin eine nach § 17 rechtswidrige Tat begehen wird.</p> <p>(2) Das Verbot wird mit Rechtskraft des Urteils oder des Strafbefehls wirksam. In die Verbotsfrist wird die Zeit, in welcher der Täter in einer Anstalt verwahrt wird, nicht eingerechnet. Ergibt sich nach der Anordnung des Verbots Grund zu der Annahme, dass die Gefahr, der Täter werde nach § 17 rechtswidrige Taten begehen, nicht mehr besteht, so kann das Gericht das Verbot aufheben, wenn es mindestens sechs Monate gedauert hat.</p> <p>(3) Wer einem Verbot nach Absatz 1 zuwiderhandel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p>	<p>(1) 법 제17조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책임무능력을 증명하거나 책임무능력이 조각되지 않은 이유로 유죄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그러한 자가 계속 하여 제17조에 따른 불법행위를 범할 위험이 있으면, 법원은 모든 동물 또는 특정한 종류의 동물을 보유, 사육, 매매하거나 그 밖에 동물과 직업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최저 1년에서 최고 5년 까지의 기간 동안 또는 영구히 금지할 수 있다.</p> <p>(2) 이와 같은 금지는 판결 또는 형벌명령이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행위자가 시설에 구금된 기간은 금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 행위자가 제17조에 따른 불법 행위를 범할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고 금지기간이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법원은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p> <p>(3) 제1항의 금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p>
§ 20a	제20조의a
<p>(1) Sind dringende Gründe für die Annahme vorhanden, dass ein Verbot nach § 20 angeordnet werden wird, so kann der Richter dem Beschuldigten durch Beschluss das Halten oder Betreuen von sowie den Handel oder den sonstigen berufsmäßigen Umgang mit Tieren jeder oder einer bestimmten Art vorläufig verbieten.</p> <p>(2) Das vorläufige Verbot nach Absatz 1 ist aufzuheben, wenn sein Grund weggefallen ist oder wenn das Gericht im Urteil oder im Strafbefehl ein Verbot nach § 20 nicht anordnet.</p> <p>(3) Wer einem Verbot nach Absatz 1 zuwiderhandel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p>	<p>(1) 제20조에 따른 금지명령이 내려져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결정을 통하여 모든 동물 또는 특정한 종류의 동물을 보유, 사육, 매매하거나 그 밖에 동물과 직업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p> <p>(2)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금지는 그와 같은 사유가 소멸되거나 법원이 판결 또는 형벌명령으로 제20조에 따른 금지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취소된다.</p> <p>(3) 제1항의 금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p>

※ 자료 : 윤철홍, 앞의 글, p.32 이하 번역 참조.



나아가 독일의 법규범 가운데 최상위에 있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GG)은 1994년 제20조의a에 국가의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으로서 ‘자연적 생활기반’(natürliche Lebensgrundlagen)의 보호 의무 규정을 두었으며,<sup>15)</sup> 2002년 개정에서는 국가목표에 동물복지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해당 조항의 보호대상에 ‘동물’을 추가하였다.<sup>16)</sup>

표 7 | 독일 「기본법」(GG) 규정

원 문	번 역
Art 20a  Der Staat schützt auch in Verantwortung für die künftigen Generationen die natürlichen Lebensgrundlagen und die Tiere im Rahmen der verfassungsmäßigen Organe durch die Gesetzgebung und nach Maßgabe von Gesetz und Recht durch die vollziehende Gewalt und die Rechtsprechung.	제20a조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으로서, 헌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을 통하여 그리고 법률 및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과 사법을 통하여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

※ 자료 : 국회도서관,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2018, p.22.

### 3. 스위스

2000년 전면개정된 스위스 「연방헌법」<sup>17)</sup>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BV)은 법치국가원리 및 사회국가원리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원리(ökologisches Prinzip)를 중요한 헌법원리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장래 세대에 대한 책임(前文), 자연적 삶의 기반의 영구적인 보전(제2조 제4항), 피조물(被造物)의 존엄(Würde der Kreatur, 제120조 제2항)과 같은 규정에서 구체화되고 있다.<sup>18)</sup> 특히 피조물의 존엄(Würde der Kreatur) 개념은 1980년 「Aargau주(州) 헌법」(Verfassung des Kantons Aargau)에서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sup>19)</sup> 1992년 개정을 통해 「연방헌법」에도 도입되었으며,<sup>20)</sup> 이는 2000년

15) Gesetz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v. 27. 10. 1994 [독일 연방법률 관보 웹사이트 (최종 검색일 : 2021. 11. 17.),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5B%40attr\\_id%3D%27bgbl194s3146.pdf%27%5D#\\_bgbl\\_%2F%2F%5B%40attr\\_id%3D%27bgbl194s3146.pdf%27%5D\\_\\_1637138246696](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5B%40attr_id%3D%27bgbl194s3146.pdf%27%5D#_bgbl_%2F%2F%5B%40attr_id%3D%27bgbl194s3146.pdf%27%5D__1637138246696)>].

16) Gesetz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v. 26. 7. 2002 [독일 연방법률 관보 웹사이트 (최종 검색일 : 2021. 11. 17.),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2F%2F%5B%40attr\\_id%3D%27bgbl102s2862.pdf%27%5D#\\_bgbl\\_%2F%2F%5B%40attr\\_id%3D%27bgbl102s2862.pdf%27%5D\\_\\_1637139461596](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2F%2F%5B%40attr_id%3D%27bgbl102s2862.pdf%27%5D#_bgbl_%2F%2F%5B%40attr_id%3D%27bgbl102s2862.pdf%27%5D__1637139461596)>].

17) 스위스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및 로망슈어를 국어로 정하고 있는데(「연방헌법」 제4조), 이하에서는 독일어를 기준으로 하여 서술하였다.

18) 박영도, 『스위스연방의 헌법개혁과 향후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04, pp.39-40.

19) 「Aargau주 헌법」 제14조 과학과 예술의 자유

과학 교육, 연구 및 예술 활동은 자유이다. 교육과 연구는 피조물의 존엄을 존중하여야 한다.

Verfassung des Kantons Aargau § 14 e) Wissenschafts- und Kunstfreiheit

Die wissenschaftliche Lehre und Forschung sowie die künstlerische Betätigung sind frei. Lehre und Forschung haben die Würde der Kreatur zu achten.

20) 다만 프랑스어본 「연방헌법」에서는 이를 ‘살아 있는 유기체의 완전성’(l'intégrité des organismes vivants)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전면 개정에도 있어서도 제120조 제2항에 유지되었다.<sup>21)22)</sup>

스위스는 오스트리아 「일반민법」(ABGB) 및 독일 「민법」(BGB) 개정의 영향을 받아 2002년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일련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당초 1992년 스위스 연방하원<sup>23)</sup> 의원 François Loeb가 ‘Tier keine Sache’(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입법안을 일반 제안의 형태로 제출하였고,<sup>24)</sup> 1993년에는 연방하원 의원 Suzette Sandoz가 ‘Wirbeltiere. Gesetzliche Bestimmungen’(척추동물과 법)이라는 입법안을 역시 일반 제안의 형태로 제출하였다.<sup>25)</sup> 1999년에는 연방상원의원 Dick Marty가 ‘Die Tiere in der schweizerischen Rechtsordnung’(스위스 법질서에서의 동물)이라는 제목으로 「민법」(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채권법」(Obligationenrecht, OR), 「채무추심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Bundesgesetz über Schuldbetreibung und Konkurs, SchKG), 「형법」(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상 구체적인 조문들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고,<sup>26)</sup> 해당 안이 2002년 통과되어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sup>27)</sup>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에서는 ①-(1) 오스트리아 및 독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고(제641조의a), ①-(2) 나아가 가정에서 재산증식 또는 영리목적 없이 기르는 동물의 경우, 소유자가 이를 잃어버렸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발견자의 소유권 취득이나, 이러한 동물에 대한 시효취득은, 타 물건의 경우보다 단기간의 경과(2개월)로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제720조의a, 제722조 제1bis항, 제1ter항, 제728조 제1bis항) 규정을 신설하였다. 「채권법」에서는 ② 오스트리아 및 독일 민법과 유사하게, 가정에서 재산증식 또는 영리

21) 스위스 「연방헌법」 제120조 비인간 영역의 유전공학

1. 인간과 환경은 유전공학의 오용으로부터 보호된다.

2. 연방은 동물, 식물 및 기타 유기체의 세균 및 유전자 취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이를 통하여 피조물의 존엄과 인간, 동물 및 환경의 안전을 고려하고 동·식물 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한다.

Bundesverfassung der Schweizerischen Eidgenossenschaft Art. 120 Gentechnologie im Ausserhumanbereich

1 Der Mensch und seine Umwelt sind vor Missbräuchen der Gentechnologie geschützt.

2 Der Bund erlässt Vorschriften über den Umgang mit Keim- und Erbgut von Tieren, Pflanzen und anderen Organismen. Er trägt dabei der Würde der Kreatur sowie der Sicherheit von Mensch, Tier und Umwelt Rechnung und schützt die genetische Vielfalt der Tier- und Pflanzenarten.

22) 한민지, 「스위스법에 따른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동향」, 『서울법학』 제28권 제4호, 2021, pp.347-348.

23) 스위스 연방의회는 주(州)로 번역되는 칸톤(Kanton)을 대표하는 연방상원(Ständerat, Conseil des États)과 전 국민을 대표하는 연방하원(Nationalrat, Conseil national)으로 구성된 양원제 의회를 채택하되,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이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최용훈, 『스위스 연방의회 제도에 관한 연구-입법과정 등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9, p.3).

24) 해당 입법안은 동물이 더 이상 물건이 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변경의 결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치료비용을 지급하고, 형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동물에 대한 상해 또는 살해에 대하여 재산에 대한 범죄 대신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스위스 연방 의회 웹사이트 (최종 검색일 : 2021. 10. 21.), <<https://www.parlament.ch/de/ratsbetrieb/suche-curia-vista/geschaefft?AffairId=19920437>>)].

25) 해당 입법안은 물론법에서 필요한 경우 척추동물을 살아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조항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면서, 동물은 사람이 아니지만 살아 있는 존재임이 분명하므로 일정한 상황에 있는 동물에 대한 특별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스위스 연방 의회 웹사이트 (최종 검색일 : 2021. 10. 21.), <<https://www.parlament.ch/de/ratsbetrieb/suche-curia-vista/geschaefft?AffairId=19930459>>)].

26) 스위스 연방 의회 웹사이트 (최종 검색일 : 2021. 10. 21.), <<https://www.parlament.ch/de/ratsbetrieb/suche-curia-vista/geschaefft?AffairId=19990467>>].

27) 윤철홍, 앞의 글, p.41.

목적 없이 기르는 동물의 경우 그 치료비가 동물의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제42조 제3항), 이러한 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손해배상에 있어 그 소유자 또는 사육자의 정서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게(제43조 제1-1항)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③ 「채무추심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에서는 “가정에서 재산증식 또는 영리목적 없이 기르는 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제92조 제1a항), ④ 「형법」에서는 물건에 적용되는 규정은 동물에도 준용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10조 1-1항).

표 8 | 스위스 「민법」(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규정

원 문	번 역
Art. 482 <u>4 Wird ein Tier mit einer Zuwendung von Todes wegen bedacht, so gilt die entsprechende Verfügung als Auflage, für das Tier tiergerecht zu sorgen.</u>	제482조 4 동물을 유증받은 경우 동물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동물을 돌볼 의무가 있다.
Art. 641 1 Wer Eigentümer einer Sache ist, kann in den Schranken der Rechtsordnung über sie nach seinem Belieben verfügen. 2 Er hat das Recht, sie von jedem, der sie ihm vorenthält, herauszuverlangen und jede ungerechtfertigte Einwirkung abzuwehren.	제641조 1 물건의 소유자는 법령의 제한 내에서 이를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 2 물건의 소유자는 물건을 억류한 자에게 그것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와 모든 부당한 침해를 배제할 권리를 갖는다.
Art. 641a <u>1 Tiere sind keine Sachen.</u> <u>2 Soweit für Tiere keine besonderen Regelungen bestehen, gelten für sie die auf Sachen anwendbaren Vorschriften.</u>	제641조의a 1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2 동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Art. 720a <u>1 Wer ein verlorenes Tier findet, hat unter Vorbehalt von Artikel 720 Absatz 3 den Eigentümer davon zu benachrichtigen und, wenn er ihn nicht kennt, den Fund anzuzeigen.</u> <u>2 Die Kantone bezeichnen die Stelle, welcher der Fund anzuzeigen ist.</u>	제720조의a 1 잃어버린 동물을 발견한 사람은 제720조 제3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발견한 동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주(州)는 발견된 동물을 신고받을 관청을 지정한다.
Art. 722 1 Wer seinen Pflichten als Finder nachkommt, erwirbt, wenn während fünf Jahren von der Bekanntmachung oder Anzeige an der Eigentümer nicht festgestellt werden kann, die Sache zu Eigentum. <u>1bis Bei Tieren, die im häuslichen Bereich und nicht zu Vermögens- oder Erwerbszwecken gehalten werden, beträgt die Frist zwei Monate.</u>	제722조 1 발견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한 자는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5년간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1bis항 가정에서 재산증식 또는 영업적 목적 없이 기르는 동물의 경우 그 기간은 2개월로 한다.

원 문	번 역
<u>1ter Vertraut der Finder das Tier einem Tierheim mit dem Willen an, den Besitz daran endgültig aufzugeben, so kann das Tierheim nach Ablauf von zwei Monaten, seitdem ihm das Tier anvertraut wurde, frei über das Tier verfügen.</u>	<u>1ter항 발견자가 동물에 관한 점유를 종국적으로 포기할 의사로 동물을 동물보호소에 위탁한 경우, 동물보호소는 그 동물을 위탁 받은 후 2개월이 지나면 그 동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u>
Art. 728 1 Hat jemand eine fremde bewegliche Sache ununterbrochen und unangefochten während fünf Jahren in gutem Glauben als Eigentum in seinem Besitze, so wird er durch Ersitzung Eigentümer. <u>1bis Bei Tieren, die im häuslichen Bereich und nicht zu Vermögens-oder Erwerbszwecken gehalten werden, beträgt die Frist zwei Monate.</u>	제728조 1 타인의 동산을 5년 동안 중단 없이 계속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취득시효에 기하여 소유자가 된다. <u>1bis항 가정에서 재산증식 또는 영업적 목적 없이 기르는 동물의 경우 그 기간은 2개월로 한다.</u>

#### | 표 9 | 스위스 「채권법」(OR) 규정

원 문	번 역
Art. 42 1 Wer Schadenersatz beansprucht, hat den Schaden zu beweisen. 2 Der nicht ziffernmässig nachweisbare Schaden ist nach Ermessen des Richters mit Rücksicht auf den gewöhnlichen Lauf der Dinge und auf die vom Geschädigten getroffenen Massnahmen abzuschätzen. <u>3 Bei Tieren, die im häuslichen Bereich und nicht zu Vermögens-oder Erwerbszwecken gehalten werden, können die Heilungskosten auch dann angemessen als Schaden geltend gemacht werden, wenn sie den Wert des Tieres übersteigen.</u>	제42조 1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그 손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수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손해는 사물의 통상적인 경과와 피해자가 취한 조치를 고려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그 액수를 산정한다. <u>3 가정에서 재산증식 또는 영업적 목적 없이 기르는 동물의 경우에는 그 치료비가 동물의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적절한 손해로서 청구될 수 있다.</u>
Art. 43 1 Art und Grösse des Ersatzes für den eingetretenen Schaden bestimmt der Richter, der hiebei sowohl die Umstände als die Grösse des Verschuldens zu würdigen hat. <u>1bis Im Falle der Verletzung oder Tötung eines Tieres, das im häuslichen Bereich und nicht zu Vermögens-oder Erwerbszwecken gehalten wird, kann er dem Affektionswert, den dieses für seinen Halter oder dessen Angehörige hatte, angemessen Rechnung tragen.</u>	제43조 1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방법과 액수는 법관이 과책의 상황과 정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u>1bis항 가정에서 재산증식 또는 영업적 목적 없이 기르는 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법관은 동물이 그 보유자 또는 그(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갖는 애호 가치를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다.</u>

| 표 10 | 스위스 「채무추심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SchKG) 규정

원 문	번 역
Art. 92	제92조
1 Unpfändbar sind:	1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압류할 수 없다.
1. die dem Schuldner und seiner Familie zum persönlichen Gebrauch dienenden Gegenstände wie Kleider, Effekten, Hausgeräte, Möbel oder andere bewegliche Sachen, soweit sie unentbehrlich sind;	1. 의복, 가재도구, 가전제품, 가구, 그 밖의 동산 등 채무자와 그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
1a. Tiere, die im häuslichen Bereich und nicht zu Vermögens-oder Erwerbszwecken gehalten werden;	1a. 가정에서 재산증식 또는 영업적 목적 없이 기르는 동물

| 표 11 | 스위스 「형법」(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규정

원 문	번 역
Dritter Teil: Begriffe	3장 용어
Art. 110	제110조
3bis Stellt eine Bestimmung auf den Begriff der Sache ab, so findet sie entsprechende Anwendung auf Tiere.	3bis항 어떠한 규정이 물건에 적용되는 경우, 이는 동물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Art. 332	제332조
Wer beim Fund oder bei der Zuführung einer Sache nicht die in den Artikeln 720 Absatz 2, 720a und 725 Absatz 1 des Zivilgesetzbuches vorgeschriebene Anzeige erstattet, wird mit Busse bestraft.	물건을 발견 또는 습득하고서도 민법 제720조 제2항, 제720조의a 및 제725조 제1항에 규정된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벌금 형에 처한다.

#### 4. 프랑스

민사상 동물의 지위의 변화로 시작되어 형사상 논의로 전개된 독일 등의 논의와 달리, 프랑스의 경우는 먼저 형사상 지위의 변화가 있는 후 민사상 지위 변화가 논의되었다.<sup>28)</sup>

프랑스는 1850년 그라몽법(Loi Grammont)<sup>29)</sup>을 마련하여 ‘공연히’ 가축을 학대한 행위를 형사처벌하였고, 이를 대체한 1959년 9월 7일자 명령 제59-1051호<sup>30)</sup>는 공연성 요건을 제외하는 한편, 동물 소유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소유자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동물을 동물보호단체에 인계하거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하였다. 1963년 11월 19일자 법률 제63-1143호<sup>31)</sup>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긴급한 경우 판결 전에도 동물을 위탁

28) 오승규, 「프랑스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검토」, 『법과 정책연구』 제15집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5, p.1373.

29) Loi du 2 juillet 1850, dite Grammont, sur les mauvais traitements envers les animaux domestiques

30) Décret n° 59-1051 du 7 septembre 1959 réprimant les mauvais traitements exercés envers les animaux

31) Loi n° 63-1143 du 19 novembre 1963 protection des animaux



하도록 결정할 수 있게 하며(구 「형법」 제453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동물실험을 처벌하는 규정(구 「형법」 제454조)을 마련하였다. 1976년 7월 10일자 법률 제76-629호<sup>32)</sup>는 자연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지각이 있는 존재인 동물”(Tout animal étant un être sensible)이 그 종의 생물학적인 필요와 부합하는 조건에 놓여야 함을 규정하는 한편(제9조),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제13조), 구 「형법」 제453조의 보호법익이 침해된 경우 공익법인으로 인정된 동물보호협회가 민사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제14조) 등이 마련되었다.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형법」(le Nouveau Code Pénal)<sup>33)</sup>의 법률 부분<sup>34)</sup>은 동물학대죄를 ‘재산’에 대한 죄에서 분리하여, 제2권 ‘사람에 대한 중죄(重罪) 및 경죄(輕罪)’<sup>35)</sup>, 제3권 ‘재산에 대한 중죄 및 경죄’<sup>36)</sup>, 제4권 ‘국가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중죄 및 경죄’<sup>37)</sup>와 별도로 제5권 ‘기타의 중죄 및 경죄’<sup>38)</sup>에 규정하고 있다.<sup>39)</sup> 제5권은 제1편 ‘공중 위생 위반’<sup>40)</sup>, 제2편 ‘기타 규정’<sup>41)</sup>으로 이루어져 있으며<sup>42)</sup> 제2편은 ‘중대한 동물 학대’<sup>43)</sup>를 단일한 장(章)으로 규율하고 있고, 제1편은 제1장 ‘생물의학 윤리 위반’<sup>44)</sup>만 있는데, 해당 장에서는 제1절 ‘인간 종(種)의 보호’<sup>45)</sup>, 제2절 ‘인체의 보호’<sup>46)</sup>, 제3절 ‘사람의 배(胚)의 보호’<sup>47)</sup> 등을 규율하고 있다.<sup>48)</sup> 제2편은 아래 표와 같이 제521-1조와 제521-2조의 2개 조(條)로 이루어져 있다.

32)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최종 검색일 : 2021. 11. 2.),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LEGIARTI000006846453/1976-07-13/>>.

33) 프랑스는 형법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다가 여러 법률들과 국사원(Conseil d'Etat)의 명령(Décrets en Conseil d'Etat)을 기초로 새로운 형법을 마련하였는데, 새로운 형법은 법률 부분(Partie législative)과 명령 부분(Partie réglementaire)으로 구성되어, 법률 부분의 조항에는 단순히 조문번호만 기재되지만 명령 부분의 조항은 국사원 명령임을 알 수 있도록 조문번호 앞에 명령을 뜻하는 R(règlement)을 붙여서 나타내고 있다(유주성, 「프랑스 형법의 죄형법정주의」, 『법학논총』 제31권 제1호, 2014, p.123).

34) Partie législative

35)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프랑스 형법상 범죄는 경중에 따라 중죄(重罪, crime), 경죄(輕罪, délit), 위경죄(違警罪, contravention)로 나뉘며, 법률(loi)은 중죄와 경죄 및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명령(règlement)은 위경죄 및 그에 대한 처벌을 법률이 정하는 한계 내에서 정한다(프랑스 형법 제111-2).

36)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biens

37)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a nation, l'Etat et la paix publique

38) Des autres crimes et délits

39) 오승규, 앞의 글, p.1362.

40) Des infractions en matière de santé publique

41) Autres dispositions

42) 제1편은 ‘제1장 : 생물의학 윤리 위반’(Chapitre Ier : Des infractions en matière d'éthique biomédicale), 제2편은 ‘단일장 : 중대한 동물 학대’(Chapitre unique : Des sévices graves ou actes de cruauté envers les animaux)로 구성되어 있다.

43) Des sévices graves ou actes de cruauté envers les animaux

44) Chapitre Ier : Des infractions en matière d'éthique biomédicale

45) De la protection de l'espèce humaine

46) De la protection du corps humain

47) De la protection de l'embryon humain

48) 이상은 법무부, 『프랑스 형법』, 2008.의 번역을 참조하였다.



| 표 12 | 프랑스 「형법」(Code pénal) 규정(법률 부분)

원 문	번 역
<p>Article 521-1</p> <p>Le fait, publiquement ou non, d'exercer des sévices graves, ou de nature sexuelle, ou de commettre un acte de cruauté envers un animal domestique, ou apprivoisé, ou tenu en captivité, est puni de deux ans d'emprisonnement et de 30 000 euros d'amende.</p> <p>En cas de condamnation du propriétaire de l'animal ou si le propriétaire est inconnu, le tribunal statue sur le sort de l'animal, qu'il ait été ou non placé au cours de la procédure judiciaire. Le tribunal peut prononcer la confiscation de l'animal et prévoir qu'il sera remis à une fondation ou à une association de protection animale reconnue d'utilité publique ou déclarée, qui pourra librement en disposer.</p> <p>Les personnes physiques coupables des infract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encourent également les peines complémentaires d'interdiction, à titre définitif ou non, de détenir un animal et d'exercer,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sociale dès lors que les facilités que procure cette activité ont été sciemment utilisées pour préparer ou commettre l'infraction. Cette interdiction n'est toutefois pas applicable à l'exercice d'un mandat électif ou de responsabilités syndicales.</p> <p>Les personnes morales, déclarées pénalement responsables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rticle 121-2 du code pénal, encourent les peines suivantes :</p> <p>-l'amende suivant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131-38 du code pénal ;</p> <p>-les peines prévues aux 2°, 4°, 7°, 8° et 9° de l'article 131-39 du code pénal.</p> <p>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sont pas applicables aux courses de taureaux lorsqu'une tradition locale ininterrompue peut être invoquée. Elles ne sont pas non plus applicables aux combats de coqs dans les localités où une tradition ininterrompue peut être établie.</p> <p>Est punie des peine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toute création d'un nouveau gallodrome.</p> <p>Est également puni des mêmes peines l'abandon d'un animal domestique, apprivoisé ou tenu en captivité, à l'exception des animaux destinés au repeuplement.</p>	<p>제521-1조</p> <p>공연성 여부를 불문하고 가축, 사육되는 동물 또는 포획된 동물에 대하여 정도가 중한 학대, 성적인 또는 잔학한 행위를 하는 경우 2년의 구금형 및 3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p> <p>동물의 소유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소유자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그 동물이 사법절차에 회부되었는지와 관계 없이 동물의 처분을 결정한다. 법원은 동물의 몰수를 선고할 수 있고 그 동물을 재단에 맡기거나 공익성이 인정되거나 신고된 동물보호단체에 인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 단체는 인도받은 동물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p> <p>본조의 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연인에 대하여는 최대 5년간 동물을 보유하고 직업적 또는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종국적 또는 비종국적인 부가적인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는 그와 같은 행위에 제공된 수단이 고의로 범행의 준비 또는 실행에 이용된 경우에 그러하다. 다만 이는 선거직의 권한 행사 또는 노동조합 책임자의 권한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법인에 대하여는 제121-2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형사책임이 있음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에 과하는 형은 다음과 같다.</p> <p>-제131-38조에 규정된 벌금형</p> <p>-제131-39조 제2호, 제4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규정된 형</p> <p>투우에 대하여는 그 전통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에 한하여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는 또한 투계의 경우에도 중단 없는 전통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새로운 투계장을 만드는 행위는 본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p> <p>가축, 사육되는 동물 또는 포획된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제1항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다만, 재번식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원 문	번 역
Article 521-2  Le fait de pratiquer des expériences ou recherches scientifiques ou expérimentales sur les animaux sans se conformer aux prescriptions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est puni des peines prévues à l'article 521-1.	제521-2조  국사원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르지 않고 동물에 대한 실험 또는 과학적 또는 실험적 연구를 하는 행위는 제521-1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 자료 : 법무부, 『프랑스 형법』, 2008. 번역 참조.

한편 국사원령 부분<sup>49)</sup>에서는 ‘가축, 사육되는 동물 또는 포획된 동물’을 ‘과실 등으로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제3급 위경죄(제R. 653-1조)로, 공연 여부를 불문하고 이러한 동물을 ‘필요 없이’ ‘학대’하는 행위를 제4급 위경죄(제R. 654-1조)로, ‘죽이는 행위’를 제5급 위경죄(제R. 655-1조)로 각 규율하고 있다.<sup>50)</sup>

표 13 | 프랑스 「형법」(Code pénal) 규정(국사원령 부분)

원 문	번 역
Article R653-1  Le fait par maladresse, imprudence, inattention, négligence ou manquement à une obligation de sécurité ou de prudence imposée par la loi ou les règlements, d'occasionner la mort ou la blessure d'un animal domestique ou apprivoisé ou tenu en captivité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3e classe.  En cas de condamnation du propriétaire de l'animal ou si le propriétaire est inconnu, le tribunal peut décider de remettre l'animal à une oeuvre de protection animale reconnue d'utilité publique ou déclarée, laquelle pourra librement en disposer.	제R. 653-1조  서투름, 경솔, 부주의, 태만 또는 법령에 의한 안전의무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가축, 사육되는 동물 또는 포획된 동물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행위는 3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동물의 소유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소유자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공익성이 인정되거나 신고된 동물보호단체에 그 동물을 인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단체는 인도받은 동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Article R654-1  Hors le cas prévu par l'article 521-1, le fait, sans nécessité, publiquement ou non, d'exercer volontairement des mauvais traitements envers un animal domestique ou apprivoisé ou tenu en captivité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4e classe.	제R. 654-1조  제521-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 여부를 불문하고 필요 없이 가축, 사육되는 동물 또는 포획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제4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49)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50) 3급 위경죄는 450유로(약 60만 원) 이하, 4급 위경죄는 750유로(약 100만 원) 이하, 5급 위경죄는 1,500유로(약 2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5급 위경죄의 누범은 법률이 이를 경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3,000유로(약 400만 원)까지 가중할 수 있다(형법전 법률 부분 제131-133조).

원 문	번 역
<p>En cas de condamnation du propriétaire de l'animal ou si le propriétaire est inconnu, le tribunal peut décider de remettre l'animal à une oeuvre de protection animale reconnue d'utilité publique ou déclarée, laquelle pourra librement en disposer.</p> <p>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sont pas applicables aux courses de taureaux lorsqu'une tradition locale ininterrompue peut être invoquée. Elles ne sont pas non plus applicables aux combats de coqs dans les localités où une tradition ininterrompue peut être établie.</p>	<p>동물의 소유자가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소유자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공익성이 인정되거나 신고된 동물보호단체에 그 동물을 인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단체는 인도받은 동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p> <p>투우에 대하여는 그 전통이 계속되고 있는 지방에 한하여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는 또한 투계의 경우에도 중단 없는 전통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Article R655-1</p> <p>Le fait, sans nécessité, publiquement ou non, de donner volontairement la mort à un animal domestique ou apprivoisé ou tenu en captivité est puni de l'amende prévue pour les contraventions de la 5e classe.</p> <p>La récidive de la contravention prévue au présent article est réprimée conformément à l'article 132-11.</p> <p>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sont pas applicables aux courses de taureaux lorsqu'une tradition locale ininterrompue peut être invoquée. Elles ne sont pas non plus applicables aux combats de coqs dans les localités où une tradition ininterrompue peut être établie.</p>	<p>제R. 655-1조</p> <p>공연 여부를 불문하고 필요 없이 가축, 사육되는 동물 또는 포획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제5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p> <p>본조의 위경죄의 누범은 제132-11조에 따라 처벌한다.</p> <p>투우에 대하여는 그 전통이 계속되고 있는 지방에 한하여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는 또한 투계의 경우에도 중단 없는 전통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 자료 : 법무부, 『프랑스 형법』, 2008. 번역 참조.

종래의 프랑스 「민법」(Code civil)은 동물을 ‘성질에 의한 동산’(meuble par nature)으로 보면서, 경작에 이용되는 동물 등은 역사적으로 농업경영에 필수적 요소로 간주되어 왔기에 ‘용도에 의한 부동산’(immeubles par destination)으로 보았다.<sup>51)</sup> 1999년 1월 6일 법률 제 99-5호<sup>52)</sup>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은 ‘용도에 의한 부동산’(immeuble)이 되는 ‘물건’(objet)에 ‘경작을 위하여 정착된 동물’이 포함된다고 보고(제524조),<sup>53)</sup> ‘성질에 의한 동산’(meubles par leur nature)의 대상이 되는 ‘물체’(corp)에 ‘동물’이 포함된다고 보았다(제528조).<sup>54)</sup>

51) 윤철홍, 앞의 글, p.59.

52) Loi n° 99-5 du 6 janvier 1999 relative aux animaux dangereux et errants et à la protection des animaux

53) Article 524 (Modifié par Loi 84-512 1984-06-29 art. 8 I JORF 30 juin 1984 en vigueur le 1er juillet 1985)

Les objets que le propriétaire d'un fonds y a placés pour le service et l'exploitation de ce fonds sont immeubles par destination.

Ainsi, sont immeubles par destination, quand ils ont été placés par le propriétaire pour le service et l'exploitation du fonds :

Les animaux attachés à la culture ;

54) Article 528 (Création Loi 1804-01-25 promulguée le 4 février 1804)

Sont meubles par leur nature, les corps qui peuvent se transporter d'un lieu à un autre, soit qu'ils se meuvent par eux-mêmes, comme les animaux, soit qu'ils ne puissent changer de place que par l'effet d'une force étrangère, comme les choses inanimées.

1999년 1월 6일 법률 제99-5호 개정으로, 「민법」은 동물을 물건(objet)과 동물(제524조),<sup>55)</sup> 물체(corp)와 동물(제528조)<sup>56)</sup>을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2015년 2월 16일 제2015-177호<sup>57)</sup>로 「민법」이 개정되어, 동물이 감각이 있는 생명체로서 이를 보호하는 법률의 유보 아래 재산(bien) 제도에 따르도록 하고(제515-14조 신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일 수 있는 재산(bien)은 성질에 의한 동산으로 하였으며(제528조),<sup>58)</sup> 일정한 동물은 부동산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제524조).<sup>59)</sup>

| 표 14 | 프랑스 「민법」(Code civil) 규정

원 문	번 역
Livre II : 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	제2권 : 재산과 소유권의 변동
Article 515-14	제515-14조
Les animaux sont des êtres vivants doués de sensibilité. Sous réserve des lois qui les protègent, les animaux sont soumis au régime des biens.	동물은 감각이 있는 생명체이다. 동물은 이를 보호하는 법률의 유보 아래 재산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자료 : 오승규, 앞의 글, p.1371. 번역 참조.

## 5. 시사점

### 가. 동물과 물건과의 관계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3개 국가는 ①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면서, ②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③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동물에 대하여는 물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는, ②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③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재산 제도에 따른다는 점은 위 국가들과 같으나, ① 명시적으로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기보다, ‘감각이 있는 생명체’로서 동물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점에서 위

55) Article 524 (Modifié par Loi n°99-5 du 6 janvier 1999 – art. 24 () JORF 7 janvier 1999)

Les animaux et les objets que le propriétaire d'un fonds y a placés pour le service et l'exploitation de ce fonds sont immeubles par destination.

56) Article 528 (Modifié par Loi n°99-5 du 6 janvier 1999 – art. 25 () JORF 7 janvier 1999)

Sont meubles par leur nature les animaux et les corps qui peuvent se transporter d'un lieu à un autre, soit qu'ils se meuvent par eux-mêmes, soit qu'ils ne puissent changer de place que par l'effet d'une force étrangère.

57) LOI n° 2015-177 du 16 février 2015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et à la simplification du droit et des procédures dans les domaines de la justice et des affaires intérieures

58) Article 528 (Modifié par LOI n°2015-177 du 16 février 2015 – art. 2)

Sont meubles par leur nature les biens qui peuvent se transporter d'un lieu à un autre.

59) Article 524 (Modifié par LOI n°2015-177 du 16 février 2015 – art. 2)

Les objets que le propriétaire d'un fonds y a placés pour le service et l'exploitation de ce fonds sont immeubles par destination. Les animaux que le propriétaire d'un fonds y a placés aux mêmes fins sont soumis au régime des immeubles par destination.

국가들과 차이가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동물을 보호하는 별도의 법률’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는데, 동물의 보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프로그램적 규정<sup>60)</sup>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보호는 대부분 사법(私法)적인 과제가 아니라 공법(公法)과 형법(刑法)의 과제에 속한다.<sup>61)</sup> 한편 프랑스 하원(Assemblée nationale)에서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의 변경이 논의될 당시, ‘법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고 사람(les personnes)과 재산(les biens) 사이에 중간 범주를 만드는 것을 피하면서도 감각 있는 존재로서 동물의 특성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이 지적되기도 하였는데,<sup>62)</sup> 타 입법례와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이러한 논의가 있었던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15 | 사법상 동물의 지위 관련 규정 비교

국 가	원 문	번 역
오스트리아	§ 285a. Tiere sind keine Sachen; sie werden durch besondere Gesetze geschützt. Die für Sachen geltenden Vorschriften sind auf Tiere nur insoweit anzuwenden, als keine abweichenden Regelungen bestehen.	제285조의a.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물건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동물에게 적용된다.
독일	§ 90a Tiere Tiere sind keine Sachen. Sie werden durch besondere Gesetze geschützt. Auf sie sind die für Sachen geltenden Vorschriften entsprechend anzuwenden, soweit nicht etwas anderes bestimmt ist.	제90조의a 동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에 대하여는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스위스	Art. 641a 1 Tiere sind keine Sachen. 2 Soweit für Tiere keine besonderen Regelungen bestehen, gelten für sie die auf Sachen anwendbaren Vorschriften.	제641조의a 1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2 동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프랑스	Article 515-14 Les animaux sont des êtres vivants doués de sensibilité. Sous réserve des lois qui les protègent, les animaux sont soumis au régime des biens.	제515-14조 <b>동물은 감각이 있는 생명체이다.</b> 동물은 이를 보호하는 법률의 유보 아래 재산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타 입법례와 비교하여 특색이 있는 부분을 강조 표시하였다. 이하 같다.

60) 구속력 없는 형성가능성이나 목표방향만을 열어 놓는 규정을 말한다(최희수, 「헌법 안에서의 동물의 위치와 국가의 의무-독일 동물헌법조항의 규범적 의미를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제19호, 2017, p.10.).

61) 윤철홍, 앞의 글, p.12.

62) 프랑스 하원 웹사이트 (최종 검색일 : 2021. 11. 23.), <<https://www.assemblee-nationale.fr/14/cr/2013-2014/20140190.asp>>.

## 나. 민사법상 구체적인 내용 규정

### (1) 개관

이들 국가들은 동물이 물건과 구별됨을 규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 내용을 정한 규정들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동물의 지위 향상을 꾀하고 있다. 최초로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를 규정한 오스트리아의 경우 일정한 범위의 동물 치료비에 관한 특칙을 함께 규정하고 이후 집행법에 일정한 가축을 압류금지 재산의 대상으로 규율하였고, 독일 또한 유사 규정들을 마련하였으며, 스위스는 추가로 동물 사상으로 인한 위자료 특칙, 단기 취득시효 규정 등을 마련하였다.

표 16 | 민사법 개정 규정 비교

비 고	오스트리아	독 일	스 위 스	프 랑 스
개정 시기	1988	1990	2002	2015
물건 여부	물건 아님 (단, 물건 규정 준용) (§ 285a)	물건 아님 (단, 물건 규정 준용) (§ 90a)	물건 아님 (단, 물건 규정 준용) (§ 641a)	명시적 규정 없음 (단, 생명체 지위 명시 재산 제도 적용 규정)
손해배상 특칙	치료비 특칙 (§ 1332a)	치료비 특칙 [§ 251(2) 후문]	치료비 특칙 [OR § 42(3)]	-
			위자료 특칙 [OR § 43(1bis)]	
소유권 내용 관련	-	별도 언급 있음 (§ 903 후문)	-	-
소유권 취득 관련	-	-	단기 시효취득 등 [§ 720a, § 722(1bis)(1ter), § 728(1bis)]	-
압류금지 특칙	감정적 유대가 있고 양도할 목적이 아닌 가축 [EO § 250. (1) 4] <sup>63)</sup>	가정에서 영리 목적 없이 기르는 경우 (단, 채권자 신청에 따라 제한 가능) (ZPO § 811c)	가정에서 영리 목적 없이 기르는 경우 [SchKG § 92(1a)]	-

### (2) 일정 범위의 동물 치료비 등에 관한 손해배상 특칙

민사법상 특별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마다 약간씩 다르게 마련되어 있다. 동물 치료비 특칙과 관련하여 오스트리아에서 이는 ‘합리적인 동물보유자’가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되며, 독일에서는 ‘동물의 교환가치를 현저히 상회한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동물 치료비뿐만 아니라 동물 살상으로 인한 위자료에 관하여도 손해배상 범위의 특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규정들은

63) 위 부분은 1996년 개정으로 압류금지 재산을 규정한 제250조에 추가되었으며, 당초 대상 동물의 가액 제한이 있었으나 2021. 7. 1.부터 해당 부분이 삭제되었다.



모든 동물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재산증식 또는 영업적 목적 없이’ 기르는 동물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 표 17 | 손해배상 특칙 범위 비교<sup>64)</sup>

국 가	원 문	번 역
오스트리아	§ 1332a. Wird ein Tier verletzt, so gebühren die tatsächlich aufgewendeten Kosten der Heilung oder der versuchten Heilung auch dann, wenn sie den Wert des Tieres übersteigen, soweit auch ein verständiger Tierhalter in der Lage des Geschädigten diese Kosten aufgewendet hätte.	제1332조의a.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합리적인 동물 보유자가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 또는 치료를 시도하는 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비록 그 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배상되어야 한다.
독일	§ 251 (2) Der Ersatzpflichtige kann den Gläubiger in Geld entschädigen, wenn die Herstellung nur mit unverhältnismäßigen Aufwendungen möglich ist. Die aus der Heilbehandlung eines verletzten Tieres entstandenen Aufwendungen sind nicht bereits dann unverhältnismäßig, wenn sie dessen Wert erheblich übersteigen.	제251조 (2) 원상회복이 과도한 비용지출에 의하여만 가능한 경우에는 배상 의무자는 금전으로 배상할 수 있다. 피해입은 동물을 치료하는 비용이 동물의 가액을 현저히 상회한다는 것만으로 그 비용지출이 과도한 것이 되지는 아니한다.
스위스	(OR) Art. 42 3 Bei Tieren, die im häuslichen Bereich und nicht zu Vermögens- oder Erwerbszwecken gehalten werden, können die Heilungskosten auch dann angemessen als Schaden geltend gemacht werden, wenn sie den Wert des Tieres übersteigen.	채권법 제42조 3 가정에서 재산증식 또는 영업적 목적 없이 기르는 동물의 경우에는 그 치료비가 동물의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적절한 손해로서 청구될 수 있다.
	(OR) Art. 43 1bis Im Falle der Verletzung oder Tötung eines Tieres, das im häuslichen Bereich und nicht zu Vermögens- oder Erwerbszwecken gehalten wird, kann er dem Affektionswert, den dieses für seinen Halter oder dessen Angehörige hatte, angemessen Rechnung tragen.	채권법 제43조 1bis항 가정에서 재산증식 또는 영업적 목적 없이 기르는 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법원은 동물이 그 보유자 또는 그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갖는 애호 가치를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다.

### (3) 일정한 동물에 관한 압류금지 특칙

압류금지 특칙을 마련한 오스트리아, 독일 및 스위스의 경우 공통적으로 압류금지의 대상이 되는 동물은 ‘모든 동물’이 아니라 ‘영리 목적’ 없이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에 한정된다. 또한 독일 「민사소송법」(ZPO)의 경우 동물이 고가(高價)인 경우 예외적으로 압류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함께 두어, 채권자의 이익 또한 고려하고 있다.<sup>65)</sup>

64) 이하 밑줄은 강조 표시를 위해 사용하였다.

65) 스위스의 경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금지 특칙이 마련되기 이전에 이미 압류금지 재산이 고가인 경우 예외적으로 압류를 허용하는 규정[SchKG § 92(3)]이 마련되어 있었다.

| 표 18 | 압류금지 특칙 범위 비교

국 가	원 문	번 역
오스트리아	(EO) § 250. (1) Unpfändbar sind  4. nicht zur Veräußerung bestimmte Haustiere, zu denen eine gefühlsmäßige Bindung besteht, sowie eine Milchkuh oder nach Wahl des Verpflichteten zwei Schweine, Ziegen oder Schafe, wenn diese Tiere für die Ernährung des Verpflichteten oder der mit ihm im gemeinsamen Haushalt lebenden Familienmitglieder erforderlich sind, ferner die Futter- und Streuvorräte auf vier Wochen;	강제집행법 § 250. (1)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압류할 수 없다.  감정적 유대가 있고 양도할 목적이 아닌 가축 및 채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영양공급에 필요한 경우 1마리의 젖소 또는 채무자가 선택한 2마리의 돼지, 염소, 또는 양, 그 밖에 4주 동안의 사료 및 깔짚의 재고
독일	(ZPO) § 811c Unpfändbarkeit von Haustieren  (1) Tiere, die im häuslichen Bereich und nicht zu Erwerbszwecken gehalten werden, sind der Pfändung nicht unterworfen.  (2) Auf Antrag des Gläubigers lässt das Vollstreckungsgericht eine Pfändung wegen des hohen Wertes des Tieres zu, wenn die Unpfändbarkeit für den Gläubiger eine Härte bedeuten würde, die auch unter Würdigung der Belange des Tierschutzes und der berechtigten Interessen des Schuldners nicht zu rechtfertigen ist.	민사소송법 제811조의c 가축의 압류금지  (1) 가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되지 않는 동물은 압류할 수 없다.  (2) 압류금지가 동물보호의 중요성 및 채무자의 정당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채권자에게 가혹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동물이 고가임을 이유로 압류를 허가한다.
스위스	(SchKG) Art. 92  1 Unpfändbar sind:  1a. Tiere, die im häuslichen Bereich und nicht zu Vermögens-oder Erwerbszwecken gehalten werden;	채무추심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 제92조  1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압류할 수 없다.  1a. 가정에서 재산증식 또는 영업적 목적 없이 기르는 동물

#### 다. 다른 법률상 보호 규정 등

독일의 경우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의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이전부터 「동물보호법」상 법원의 판결로 동물의 보유·매매·접촉 금지명령이 가능하였으며(제20조) 위 법 개정을 통해 법원 판결 전 임시명령까지 가능해졌다(제20조의a). 스위스는 법 개정을 통하여 물건에 적용되는 규정은 동물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을 형법에 마련하였다(제110조). 프랑스의 경우 「형법」에 별도 장(章)을 마련하여, 동물 살해, 상해, 학대 등의 죄를 재산(bien)에 대한 죄와 구분하여 규율하고,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에 대한 학대 등 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법원은 그로부터 소유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제521-1조, 제R. 653-1조, 제R. 654-1조).

## IV. 주요 쟁점과 과제

### 1. 동물의 민사상 지위 수정 관련 논의가 필요한 문제

#### 가. 전체 법체계에서 물건 개념의 의미

정부 제출안과 같은 비물건화 조항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에서는 「민법」이 일반사법(一般私法)으로 향후 동물과 관련된 여러 분쟁에 있어 해석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새로운 규정과 상충되는 법제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sup>66)</sup> 반면, 회의적 입장에서는 법 개정이 실효성이 없고 동물이 재산적 가치를 갖고 소유와 거래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관련 분쟁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sup>67)</sup>

물건 개념은 전체 법체계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법률행위의 대상 또는 법적 주체가 보유하는 권리의 보호 대상이 된다. 나아가 재산범죄의 출발점이 되는 ‘재물’ 개념의 기초가 되는 등, 「민법」뿐만 아니라 「형법」과 같은 다른 실정법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68)</sup>

일반적으로 권리는 일정한 사회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라고 설명되며, 이는 그 내용에 따라 객체가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물건이다. 채권은 특정인의 일정한 행위(급부)가, 지적재산권은 정신적 산물이 그 권리의 객체가 되는 등, 권리의 객체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물건은 그 중 물권의 객체가 된다.<sup>69)</sup>

물권자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물권을 주장할 수 있기에(절대성), 물권의 성립 여부나 변동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다면 제3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거래의 안전과 신속이 저해된다. 이에 따라 「민법」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획일화·정형화하는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를 취한다(제185조).<sup>70)71)</sup> 「민법」은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종의 물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sup>72)</sup> 점유권,<sup>73)</sup> 유치권,<sup>74)</sup> 질권<sup>75)</sup>이 적용된다.<sup>76)</sup>

66) 법무부 보도자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2021. 7. 19.자.

67) 양승헌,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非物件化)를 위한 입법론과 보험업 관련 영향 검토」, 『KIRI 보험법 리뷰 포커스』 제12호, 2021, p.5.

68) 양천수, 「물건 개념 재검토-민법의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법조』 제70권 제2호(통권 제746호), 2021, p.51.

69)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 민법(총칙 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p.255.

70)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71)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 민법(물권 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p.174.

72)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73)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74)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75)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76) 저당권의 경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한편,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중물에도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356조, 제358조).

이와 같은 체계 아래에서 동물이 ‘물건이 아니’지만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규정할 경우, 동물에 대한 권리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규율되어 있지 않아,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사법상 권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지 않고 공백으로 남겨둘 경우, 사인 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한편, 입법영역에서 수행하여야 할 법질서의 내용형성을 사법영역에 미루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형법」에서는 재산에 대한 죄를 정하면서,<sup>77)</sup> 그 대상이 되는 ‘재물’이나, ‘물건’에 대한 독자적인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전체 법질서의 통일성 측면에서 「형법」상 ‘재물’ 개념은 「민법」상 ‘물건’ 개념에 일치되게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sup>78)</sup> 일각에서는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행위를 무정물(無情物)에 대한 것과 같이 손괴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동물이 물건이 아니게 되면 손괴죄 적용이 배제될 것이라고 보아 이에 의의를 두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79)80)</sup> 그런데 후술할 내용처럼 형사·행정상 동물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현재에도 가능하며, 동물이 민법상 물건이 아니고 이에 따라 형법상 재물이 아니라고 볼 경우 동물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죄, 즉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장물, 권리행사방해와 같은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핀 것처럼, 프랑스 하원에서 민사상 동물의 법적 지위의 변경이 논의될 당시 ‘감각 있는 존재로서 동물의 특성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과 함께 ‘법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을 것’이 함께 논의된 점, 민사상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선언한 국가들 가운데 가장 최근에 법을 개정된 스위스의 경우 형법상 물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동물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나. 동물 물건 지위 부인 규정의 선언적 성격

법률 상호간에 모순·저촉되는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specialia generalibus derogant*), 특별법 우선의 원칙(*lex specialis derogat legi generali*)이 적용된다.<sup>81)</sup>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하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만 하는 정부 제출안이, ‘사후’에 만들어졌거나 ‘특별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에 우월한 효력을 인정하는 법의 일반 원칙 이상의 실질적인 내용을 규율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sup>82)</sup>

77)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 권리행사방해.

78) 김성수, 「민법의 물건과 형법의 재물개념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민사법과 형사법의 통일적 해석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제5권 제2호, 2007, p.149.

79) 송정은, 『동물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21, p.61.

80) 허진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회 통과 땐 벌금형 그친 동물학대 처벌 강화」, 『경향신문』, 2021년 7월 19일자. (최종 검색일 : 2021. 11. 30.),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7192058005#c2b>>.

8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참조.

82) 이에 대하여 지난 2000년간 권리의 주체인 사람과 객체인 물건을 나누어 2원주의로 이해하던 것이 유사 입법례들을 통하여 사람-동물-물건이라는

민사상 물건은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질권 등 다양한 권리의 객체가 되고, 소유자는 이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민법」에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마련하여도, 동물이 소유와 매매, 담보설정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제한되는 것은 천연기념물 또는 멸종위기 동물과 같은 ‘일정한 범위의 동물’에 대한 이용이라든가, 성적 목적 또는 가학적 목적, 과도한 고통을 주는 이용 등 ‘일정한 방식’의 이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구체적으로 일정한 금지 및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상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것만으로 이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효적 보호를 위하여 개별 영역에서 구체적 입법이 필요하다.

실효적 보호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하려면 선결적으로 「민법」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달리 보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sup>83)</sup> 그러나 동물의 실효적 보호에 필요한 개별적인 입법은 「민법」상 선언적인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예컨대 ‘문서’의 경우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만, 「형법」은 특별히 문서에 대한 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20장에서 문서에 관한 죄를 별도로 규율하며 그 위조·변조를 일반 물건의 손괴보다 가중처벌<sup>84)</sup>하고 있고,<sup>85)</sup> 동물의 경우도 「민법」상 돈을 받고 목적물을 빌려 주는 ‘임대차’ 규정이 있으나(제618조)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경품 제공, 영리 목적 대여가 금지되는 것과 같이(제8조 제5항 제3호, 제4호), 일반개념 안에 특별개념을 설정하여 더 강하게 보호하거나,<sup>86)</sup> 특별규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sup>87)</sup>하는 것이 현재도 가능하다.

유사 내용을 입법한 국가들의 예를 보아도, 개인간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일반사법인 민법에 이와 같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관하여, 동물의 보호의식에 대한 발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이와 같은 규정은 장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 또한 제기된 바 있다.<sup>88)</sup> 또한 독일의 경우도 동물이

3원주의로 변화되었고 이는 공법상 동물의 보호와 함께 실질적인 동물의 생존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윤철홍, 앞의 글, p.173), 같은 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해당 조항이 곧바로 동물에게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보호는 손해배상 특칙 등 함께 입법된 개별 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보면, 해당 조항 자체의 독자적인 의미는 선언적인 것 이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83) 김도연, 「‘물건’에서 벗어나는 반려동물,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 『LAMB international』, 2021년 3월 29일자, (최종 검색일 : 2021. 11. 24.), <<http://www.lamb.international/news/articleView.html?idxno=1365>>.

84) 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지만(「형법」 제366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225조, 제231조).

85) 위 III. 4.에서 살핀 것처럼 프랑스에서도 일찍이 형법전을 개정하면서 동물학대를 일반적인 재산에 관한 죄와 별도의 장으로 규율하였다.

86) 현재도 「동물보호법」상 같은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행위를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제46조). 해당 조항이 상당수 국민들의 법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열거된 동물학대의 범위가 협소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규정된 법정형이 가볍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규정을 개정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87) 「형법」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 뇌물, 아편, 배임수증재 행위에 제공된 제물 등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으며(제48조, 제134조, 제206조, 제357조). 이외에도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일정 범죄에 제공된 재물을 몰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88) 윤철홍, 앞의 글, p.30.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을 마련하기 전에 이미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에 대한 가해를 처벌하면서 동시에 동물에 대한 불법행위자에 관한 소유권 박탈 또는 보유 등 금지명령 또한 규정하였고(제20조), 프랑스의 경우에도 형법전에 유사한 규율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 2. 동물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

### 가. 민사상 손해배상 및 압류금지 특칙

선행 입법례들을 보면 동물의 법적 성격 변경은 해당 조문만이 단독으로 입법된 것이 아니라, 동물의 실효적인 보호를 위한 조항들이 수반되었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는 모두 민법상 동물의 치료비 배상 범위에 대한 특칙을 두었고, 집행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르는 반려동물의 압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우리의 경우도 민사영역에서 동물의 실효적 보호를 위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들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동물 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 특칙의 경우, 오스트리아에서는 ‘합리적인 동물보유자’가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범위가 제한되며, 독일에서는 ‘동물의 교환가치를 현저히 상회한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스위스에서는 동물 치료비뿐 아니라 동물의 사상에 따른 위자료에 관하여도 특칙을 마련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가정에서 재산증식 또는 영업적 목적 없이’ 기르는 동물에 한하여 적용된다. 압류금지 특칙의 경우, 이는 공통적으로 ‘영리 목적 없이’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에 한하며, 독일에서는 고가의 동물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 또한 고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려동물의 경우와 달리 경제적인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경우 이에 대하여 교환가치를 상회하는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위 규정들은 공통적으로 규율 대상인 동물의 범위를 제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 나. 기타 동물학대 처벌 및 동물보호 규정 정비

비교적 최근에 입법된 스위스 및 프랑스의 경우 형법에서도 동물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고 있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프랑스의 경우는 형법상 보호 강화가 선행되었고, 스위스는 형사적으로 물건에 적용되는 규정은 동물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독일의 경우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이 도입되기 전 이미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를 처벌하면서 동시에 동물에 대한 불법행위자에 관한 소유권 박탈 또는 보유 등 금지명령 또한 규정하였고(제20조),



프랑스의 경우에도 형법에 유사한 규율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민사상 동물 지위 규정 개정과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확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 등 제도 정비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sup>89)</sup>

## V. 결론

동물에 대한 변화된 인식은 앞서 살펴본 일부 국가들의 민사법 규정에 그치지 않는다. 독일, 스위스 등에서는 일찍부터 헌법상 인간의 생태계 보호 의무를 규율하였고, 뉴질랜드는 「1999년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1999, AWA)를 마련하여 연구, 실험 또는 교육에 있어 대형유인원<sup>90)</sup>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며,<sup>91)92)</sup> 유럽연합은 「과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에 관한 2010년 9월 2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0/63/EU」<sup>93)</sup>을 마련하여 멸종위기 종으로 분류된 척추동물, 두족류<sup>94)</sup> 및 영장류<sup>95)</sup>의 사용을 제한하고, 특히 대형유인원<sup>96)</sup>에 대한 실험을 실질적으로 금지하였다.<sup>97)</sup> 이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전통적으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이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던 상황에서 점차 동물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 나아가 동물 고유의 이익까지 고려 요소로 삼아 이용을 제한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번 정부 제출안 또한 인간의 전체 생태계에 대한 책임,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앞선 논의를 우리 법체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며, 유정물(有情物)인 동물을 무정물(無情物)과 구분하여 특별한 보호를 부여하는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법상 동물의 물건 지위를 부인하는 조항에 선언적 의미 이상이 있는지 의문이며,<sup>98)</sup> 물건 개념은 전체 법체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한편 별도 보호입법에 해당 규정의 개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에, 해당 규정의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sup>99)</sup> 나아가 동물의 지위 재정립은 인간과 동물의 전체적인 법적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인 한편, 구체적 내

89) 앞서 본 것처럼, 2021년 12월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제도를 신설하고 유죄 판결 시 수감명령·이수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90) 원문은 non-human hominid. 사람과(Hominidae)에서 인간을 제외한 고릴라, 침팬지, 보노보, 오랑우탄 등과 같은 것들을 가리킨다.

[AWA 1999, § 2(1)(N.Z.), (최종 검색일: 2021. 11. 15.), <<https://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9/0142/latest/whole.html#DLM51200>>].

91) AWA 1999, § 80(1)(c)(N.Z.), (최종 검색일: 2021. 11. 15.), <<https://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9/0142/latest/whole.html#DLM51200>>.

92) 유선봉, 「뉴질랜드 동물복지법과 대형유인원 프로젝트: 대형유인원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 『법학논집』 제35집 제1호, 2011, p.222.

93) DIRECTIVE 2010/6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10 on the protection of animals used for scientific purposes

94) 頭足類, cephalopods.

95) 원문은 non-human primates.

96) 원문은 great apes.

97) 채형복, 「EU법상 동물실험의 법적 규제-실험동물보호지침 2010/63/EU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68집, 2020, p.273.

98) 각주 5 참조. 한편 해당 규정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우리 「민법」상 동산에 성립하는 물건인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질권에 관한 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역시 「민법」에 규정된 15종의 전형계약 가운데 매매, 교환, 대차형 계약, 임차와 같이 동산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사법상 권리를 보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권리주체성(「민법」 제3조, 제34조 참조)을 얻는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99) 각주 62 참조.

용은 별도 입법에 의하여만 형성될 수 있으며 별도 입법은 주로 형사법 및 공법에 의할 것이기에, 전체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sup>100)101)</sup>

동물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하여는 선행 입법례를 참고하고 발전시켜 동물의 실효적 보호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타 입법례들이 민사상 일정 범위의 동물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압류금지 특칙을 주로 규율하며 ‘반려동물’을 주된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점, 이와 같이 보호 대상과 보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비교적 최근에 입법된 경우는 형사상 재산죄와의 관계 등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 또한 고려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동물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주로 소유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보유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또한 민법 개정과 독립적으로 「동물보호법」 및 「형법」 등에 입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100) 최희수, 「헌법 안에서의 동물의 위치와 국가의 의무-독일 동물헌법조항의 규범적 의미를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제19호, 2017, p.20.

101) 2018. 3. 26. 대통령에 의하여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헌법 개정안은 제38조에서 국가의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 시행 의무를 규정하였다.

## 참고문헌

- \* 국회도서관,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2018.
- \*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 \* 김도연, 「‘물건’에서 벗어나는 반려동물,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 『LAMB international』, 2021년 3월 29일자.
- \* 김성수, 「민법의 물건과 형법의 재물개념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민사법과 형사법의 통일적 해석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제5권 제2호, 2007.
- \* 김용담 편집대표, 『주식 민법(물권 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 \* 김용담 편집대표, 『주식 민법(총칙 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 \* 남가연, 「‘펫팸족’ 1500만...반려동물 법적지위는 ‘제자리」, 『법률신문』, 2021년 5월 10일자.
- \* 독일 연방법률 관보 웹사이트 <<https://www.bgbl.de/>>
- \* 박솔잎,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독자적 법적지위 인정」, 『법률신문』, 2021년 7월 19일자.
- \* 박영도, 『스위스연방의 헌법개혁과 향후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04.
- \* 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2004.
- \* 법무부, 『민사소송법 번역집(독일)』, 2019.
- \* 법무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회의속기록 제7권-2011년 제3기위원회 2분과 회의-』, 2011.
- \* 법무부, 『프랑스 형법』, 2008.
- \* 법무부 보도자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2021. 7. 19.자.
- \*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사공일가 제2차 회의 개최-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 2021년 4월 15일자.
- \* 송정은, 『동물의 법적 지위와 권리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학위 논문, 2021.
- \* 스위스 연방 의회 웹사이트<<https://www.parlament.ch/de>>
- \* 안소영·이계정, 「민사법적 관점에서 본 동물 관련 법제에 관한 고찰」, 『법조』 제70권 제2호(통권 제746호), 2021.
- \* 양승현,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非物件化)를 위한 입법론과 보험업 관련 영향 검토」, 『KIRI 보험법 리뷰 포커스』 제12호, 2021.
- \* 양재모,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법적 주체와 객체로서의 이중성-」, 『한양 법학』 제31권 제3집호, 2020.

- \* 양창수, 『2021년판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 박영사, 2021.
- \* 양천수, 「물건 개념 재검토-민법의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법조』 제70권 제2호 (통권 제746호), 2021.
- \* 오승규, 「프랑스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검토」, 『법과 정책연구』 제15집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5.
- \* 오스트리아 법률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s://www.ris.bka.gv.at/default.aspx>>
- \* 유선봉, 「뉴질랜드 동물복지법과 대형유인원 프로젝트 : 대형유인원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 『법학논문집』 제35집 제1호, 2011.
- \* 유주성, 「프랑스 형법의 죄형법정주의」, 『법학논총』 제31권 제1호, 2014.
- \* 윤철홍, 『민사법 체계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법무부, 2018.
- \* 윤철홍, 「스위스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68호, 2014.
- \* 이성엽, 「[Tech & Law] 인공지능도 권리주체가 될 수 있을까」, 『조선비즈』, 2021년 8월 12일자.
- \* 장은혜,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동물정책의 법적 쟁점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18.
- \* (주)메트릭스리서치, 『2020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용역보고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0.
- \* 제21대 국회 제391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2021. 12. 31.
- \* 지원림, 『제17판 민법강의』, 홍문사, 2020.
- \* 채형복, 「EU법상 동물실험의 법적 규제-실험동물보호지침 2010/63/EU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68집, 2020.
- \* 최용훈, 『스위스 연방의회 제도에 관한 연구-입법과정 등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2019.
- \* 최희수, 「헌법 안에서의 동물의 위치와 국가의 의무-독일 동물헌법조항의 규범적 의미를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제19호, 2017.
- \* 한민지, 「스위스법에 따른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동향」, 『서울법학』 제28권 제4호, 2021.
- \* 함태성, 「동물보호법의 입법적 평가와 향후 과제」, 『공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2020.
- \* 허진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회 통과 땐 벌금형 그친 동물학대 처벌 강화」, 『경향신문』, 2021년 7월 19일자.

## R E P O R T · L I S T

## NARS 현안분석 발간 일람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226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2021.12.13	문심명
제225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2021.12.10.	하혜영
제224호	유럽 차별금지법제와 시사점	2021.11.24.	김선화
제223호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	2021.11.18.	허민숙
제222호	아동 등 생애주기 단계별 정책대상 연령정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21.11.17.	박선권
제221호	해외주요국의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행 전후의 양태와 한국에의 시사점	2021.11.16.	박상윤
제220호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	2021.11.10.	김진태
제219호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소방안전 강화방안	2021.11.8.	배재현 김예성
제218호	물가 상방 리스크 요인의 주요 내용 및 쟁점	2021.11.3.	황인욱
제217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2021.11.2.	박진우
제216호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1.11.1.	김강산
제215호	육아 패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	2021.10.29.	허민숙
제214호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	2021.10.26.	김준현 박인환
제213호	일수벌금제(日收罰金制)의 현황 및 쟁점사항	2021.10.22.	박혜림
제212호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21.10.19.	김광현
제211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배제에 관한 입법 쟁점	2021.10.5.	김성호
제210호	농업 부문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및 향후 과제	2021.10.1.	김규호 유재국 장영주
제209호	가상자산 강제집행 논의의 현황과 시사점	2021.9.30.	류호연
제208호	경제위기 시 산업구조개혁 정책의 경과와 시사점	2021.9.17.	전은경
제207호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1.8.26.	박인환



**NARS** 현안분석 제227호

##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

-민사법 규정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 02-6788-4510

이 보고서 내용은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입니다.  
발간등록번호 31-9735020-001613-14  
ISSN 2586-565X

